

## "일본은 역사적시 용기, 한국은 일본용서 용기 필요"...공공외교 돌파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토론회..."정치적 결단 분위기 만들기 위한 소통 필요"

기사승인 [2015-04-08 18:18], 기사수정 [2015-04-08 18:27]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8일 주최한 '한·일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일본은 역사를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한국은 일본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일본을 비난만 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대일 공공외교를 통해 일본 내 친한(親韓) 감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사진=최태범 기자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 =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한·일관계가 일본의 독도 도발을 비롯한 역사인식 문제로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8일 "일본은 역사를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한국은 일본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일본을 비난만 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대일 공공외교를 통해 일본 내 친한(親韓) 감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주최한 '한·일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에서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일 양국이 역사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치적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했다.

진 센터장은 "한국은 일본이 역사문제 타협안을 가지고 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가"며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일본연구소장은 "한·일 양국에 강경론자와 유연론자가 존재하는데

모두 강경론자들이 주도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게 지금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우리는 강대국 눈치보기와 청와대 눈치보기, 여론 눈치보기 등 3가지 눈치보기를 그만두고 우리의 전략적 이익이 무엇인지, 일본과 같이 갔을 때 이익은 무엇인지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워싱턴에서 일본을 비난하는 것만 하면 안된다. 일본 국민들 마음을 사고 이해를 얻고 동정심을 얻고 친한 감정을 만들 수 있는 대일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근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장도 “우리 국익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도 위협이 되고 자신들 문제가 됨을 가르쳐주는 예방외교가 돼야 한다”며 “정상들은 경제 분야 등 다른 곳에 에너지를 쏟고 공공외교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예방외교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진 센터장은 “감정적 문제는 소통이 필요하고 공공외교가 필요하다”며 “한국의 리더십이 일본에 조금더 다가가는 모습으로 보일 때 감정의 고리도 점차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도 “일본과의 관계는 새로운 상태에서 미래의 비전을 보고 뭐가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며 “전문가들 활용해 일본에 보내서 공공외교를 하게 해야 한다. 1.5 트랙 차원의 대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소장은 일본이 당분간 역사도발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관측했다. 그는 “일본 역사문제는 아베 신조 총리의 결단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일본이 21세기 국제정치 환경과 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추진한 구조적 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했다.

향후 대일정책 접근과 관련, 이 소장은 “한·일관계는 지역에 안정을 주는 공공재가 될 수 있다. 경제발전 관점에서 협력하고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했고, 진 센터장은 “전략적 차원에서 일본이 왜 중요한지 재점검의 시기가 왔다. 새로운 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도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적하면서도 같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일본에 대한 압박은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일본에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아베 총리가 전제 없는 정상회담을 주장하고 있는데 전제가 없다는 것이 전제인 것 같다”며 “우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이 정상회담으로 가는 로드맵인데 이를 없애라는 것이 일본의 입장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bum@asiatoday.co.kr

최태범 기사더보기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PRINT

CLOSE